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
-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
-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
-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때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 ②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장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경찰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인 남성(23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산업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부터 6년이 지나 지역 민방위대 조직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남성(31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를 위한 빨간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급박한 사정하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 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② 등화 및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되되, 용광로화염은 공습관제뿐만 아니라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도 은폐 또는 소광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영리목적의 상설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ㄷ.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ㄹ.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며,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지역연합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② 직장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직장연합 민방위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이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ㄷ. 질병 등의 사유로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용주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ㄹ. 동원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2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의 최대 금액의 합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2017. 3. 2.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를 입은 甲은 치료를 위해 25개월(76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 보상금은 5,000만 원이지만,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 보상금은 4,500만 원이다. 아울러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다.

- ① 7천 3백만 원
- ② 1억 1천8백만 원
- ③ 1억 2천1백만 원
- ④ 1억 2천3백만 원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마을에 침투한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8. 3. 1.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의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를 하였다. 乙은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금지급신청을 하려고 한다.

- ① 甲은 긴급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 증명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乙이 2018. 4. 2. 10:00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2018. 5. 2. 24:00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해 2018. 10. 1. 10:00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乙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2018. 11. 30. 24:00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군대원 甲은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을 받고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데도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탁경찰서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甲이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비는 현재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 ①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로 한다.
- ② 甲은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25. 「예비군법 시행령」상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② 여성 예비군대원은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와 예비군화가 아닌 것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예비군특수복으로서 근무복은 사계절의 구별에 따라 구분한 복장을 착용한다.
- ④ 예비군특수복으로서 야전상의 · 점퍼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한다.

- 문 26. 예비군법령상 벌칙 규정이 정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다른 것은?
- ①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입하는 사람의 검문이 허용되는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
 - ③ 국방부장관이 전시,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령하였는데, 그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 ④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탄약을 과실로 분실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 ② 재난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 ③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는 이를 확인·종합하여 중앙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국 내 B지역에서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B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B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중국 내 B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범죄안전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의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A군의 군수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단체의 장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구두로 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구두로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면 그 조치를 할 수 없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보·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 ②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 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4. A군의 일정 지역에서 화생방사고로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군의 군수는 사고지역을 여행 중이던 甲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A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화생방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로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직접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 ③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I - 헌법

문 1.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 ②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규정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 ③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에도 들어맞으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
- ④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문 2.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 여부 및 그 기간을 제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ㄴ. 종국결정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그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ㄷ.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한다.
-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데, 이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3.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두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④ 국가등의 사경제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고, 연혁적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 것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그 배경 및 시기를 달리하는 등 국가배상사건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과는 다르다.

문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9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통고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및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5.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문 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 ②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③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 ④ 국가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라는 특혜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면 모르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에는 공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 ④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또는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문 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9. 다음 제시문의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A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B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나) A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C를 선포할 수 있다.
- (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D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A가 (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나)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② B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A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C를 선포한 때에는 A는 지체없이 B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D에는 국회와 정부, 법원이 해당된다.

문 10.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문 11.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기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③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 12.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 ㄷ. 헌법 제86조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15.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② 우리나라가 2003년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였고, 2006년부터 개정교토협약이 발효된 이상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정교토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 ③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